

보건의료분야에서의 남북정상회담 및 남북총리회담의 의의와 향후 추진방향

The Significance of the First Inter-Korean Prime Ministers' Talks for the Inter-Korean Cooperation in the Health Sector

황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공보건의료팀 팀장

2007년 10월,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의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2007년 11월 15일, 제차 남북총리회담이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보건의료분야에서는 '남과 북은 병원, 의료기구, 제약공장 현대화 및 건설과 원료지원 등을 추진하고 전염병 통제와 한의학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한다'는 합의문을 채택하여 보건의료 당국간 협력을 통해 민족 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내용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병원, 제약공장 현대화 및 건설사업의 경우, 남북 당국간 합의배경에 다소 시각의 차이가 있었으나 상호 전문가를 참여시켜 북측의 수급현황을 진단한 후 협력기회를 높인다면 우선순위 선정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북측의 자생력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개발협력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추진에 따른 재원확보가 관건인 바, 향후 핵문제가 완전 해결되면 남북 협력에서 나아가 남북 당사자 원칙에 기초한 국제기구와의 연계 협력이나 참여를 통해 협력적 분업관계로 발전, 효율적 사업이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1. 남북 정상회담 및 총리회담에 서의 보건의료분야의 합의

1) 제2차 남북 정상회담 합의내용

2000년 6월, 남북 정상이 최초로 평양에서 역사적인 만남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당시 '6.15 남북공동선언'에서는 남과 북이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문화·체육·보건 등 제반 분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나가기로 합의함에 따라 남측과 북측은 다양한 분

야에서 자유롭게 교류와 협력을 확대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이후 민간 대북 지원창구의 다원화 조치로 인하여 대북 창구가 확대됨에 따라 보건의료분야의 대부분의 단체는 이 시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당시의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계승, 발전시킨 참여정부는 북핵문제로 남북관계가 경색된 가운데에서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07년 2월, 북측의 핵시설 폐쇄와 불능화 이행 합의이후 10월 4일, 남과 북은 평양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여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채

택하였다. 이로써 남과 북은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 공동의 번영 및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 데 당국간 합의하였는데 의의를 가진다.

동 선언에서 합의된 8개 사항 중에서 보건의료분야의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제 5항에서 찾을 수 있다.

5.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 남과 북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2) 제1차 남북 총리회담 합의내용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합의를 이행하기 위하여 2007년 11월 14일부터 3일간 서울에서 제1차 남북총리회담이 진행되었다. 남북 정상간 합의사항에 대한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보건의료분야의 경우 남측 「보건복지부」와 북측 「보건성」 관계자가 참석하였는데, 다음

과 같이 보다 구체화된 합의를 하게 되었다. 이로써 보건의료 당국간 협력을 통해 민족 공동의 삶의 질을 극대화하고 보건의료분야에서 통일 지향적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구체적인 내용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에 관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의 8개 조항에서 보건의료분야의 합의내용은 3조 4항에서 찾을 수 있다.

- 4) 자원개발, 농업, 보건의료 등 분야별 협력
- 남과 북은 병원, 의료기구, 제약공장 현대화 및 건설, 원료지원 등을 추진하고 전염병 통제와 한의학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 남과 북은 지하자원개발, 농업, 보건의료, 수산, 환경보호분야의 협력을 위해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에 ‘남북보건의료협력·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들을 구성, 운영하기로 하였다.

2. 남북 정상회담 및 남북 총리 회담의 의의

제1차 남북 총리회담의 합의서에는 ‘남과 북은 병원, 의료기구, 제약공장 현대화 및 건설, 원료지원 등을 추진하고 전염병 통제와 한의학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총리회담 이전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남측 「보

건복지부」 당국은 남측의 필요에 의해, 또는 남측이 북측의 보건의료 현실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북측에게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들을 구상, 제안한 바 있다. 약 한달 뒤 진행된 제1차 남북 총리회담에서는 정상회담 당시 제안하였던 사업들을 대부분 합의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합의한 사업들은 북측 보건의료분야의 자생력을 확보하는 데 일차적인 사업대상이라는 점에서 타당하다.

그간 민간단체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북 보건의료 지원사업이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부분적,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온 바, 이번 남북 정상회담과 총리회담에서 남북간 당국자가 최초로 만나 당국 차원에서 보건의료분야의 남북 협력을 일관성 있게 진행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였다는 데에는 그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남북 당국간 협력이 북측 보건의료와 방역분야의 복구를 통해 북한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켜 남북간 건강수준의 격차를 완화시킴으로써 민족 동질감을 조기에 회복하고, 나아가 경제협력 등 타분야의 안정적 교류·협력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남북 공히 이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전염병 통제를 위해 상호 협력함으로써 남측은 상호 접촉이 빈번한 개성공업지구 등으로부터의 전염병 유입을 사전 차단하여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집약적 의료산업에서 노동생산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북측에게는 희생되고 있는 경제에 타격을 주는 전염병을 통제함으로써 경제의 안정적 기반의 초석이 되고, 의료기구 및 제약공장 현대화를 통해 의료기자재 및 약품 등의 안정적 공급채널을 확보해 준다는 점에서 win-win 내용의 합의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합의 내용면에서는 타당하고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합의내용에 병원, 의료기구, 제약공장 현대화 및 건설 등은 기존 민간 대북 지원단체가 수행하여 온 사업들로서, 당국간 사업이 개발협력을 위한 차별화된 내용을 담지 못하였다는 데 아쉬움이 있다. 즉, 의료인력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이나 교류·협력 내용이 합의내용에 포함되어야 했다. 의료시설 현대화에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되는 기술적 노하우를 교육과정을 통해 습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사업의 효과는 물론 자생력(sustainability)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간단체의 대북 보건의료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이러한 지적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OECD의 DAC(개발원조위원회)에서 제시한 보건의료분야의 공적개발원조사업(ODA)의 CRS(Creditor Report System) 코드에 의거하여¹⁾ 대북 사업을 분류하여 보면 <표 1>과 같다. 보건일반(health, general) 부문에 속하는 ‘의료서비스’ 분야는 현재 민간단체가 평양의학병원 및

1) OECD, Recent Trends i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to Health, OECD, 2000.

조선적십자병원 등을 비롯한 10여개 3, 4차진료기관에 해당되는 종합병원 현대화 및 건립사업과 임상실험실 보강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기초보건(basic health) 부문의 경우, '기초보건 의료(basic health care)'에 속하는 기초의약품 및 백신 등의 기초약품 지원, '기초영양제' 공급, 결핵퇴치(infectious diseases control) 등의 '감염성질환 관리', '기초보건인프라(basic health infrastructure)'에 속하는 구역병원 건립(리 인민병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그간 민간부문의 하드웨어 중심의 물적 지원사업에서 진일보 하여 명실공히 당국간 합의된 협력사업의 내실화를 통해 협력사업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품질관리를 기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책임성 있는 교류·협력 기반을 확보하지 않으면 형식적인 합의에 지나지 않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3. 남북 총리회담 합의에 대한 남북간 시각 차이

한 나라의 보건의료체계가 열악할 때 생명의 위협을 받는 건강취약계층은 임산부와 아동이다. 북측의 임산부 및 수유부는 약 89만명이며, 7세미만 어린이는 230만명으로 추정되는데²⁾, 북측의 모성사망비는 출생 10만명당 370명, 영아사망률은 출생 1천명당 42명으로 남측의 각 26배, 8배의 높은 사망 수준을 보이고 있다^{3) 4)}. 남측은 북측의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여 일차적인 건강보호대상인 임산부와 아동 건강보호에 우선순위를 두고 병원 현대화사업에 합의하게

되었다. 생애 초기인 아동기에 건강이 취약하고 영양결핍이 지속될 경우, 인체내 호르몬계와 자율신경계 등의 평형이 붕괴되고 면역계 손상 등으로 인해 신체적 장애는 물론 정신발육 지체와 정서·행동장애를 초래하기 때문에 민족의 건강공동체를 구현하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북측 당국은 산원 및 아동병원 뿐 아니라 도급 이상의 종합병원과 심장혈관분야의 전문병원의 설립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1차에서 4차 진료기관으로 단계화된 북측 의료서비스전달체계의 기능을 복구하기 위한 우선순위 사업대상기관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취약계층의 기본 건강권을 확보하는데 형평성이 있고 비용효과적인 접근으로 인정하는 1차 진료기관이다. 요컨대, 일차적으로 지역사회 최일

선 기관에서 흔한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서비스 제공 및 예방접종사업과 영양지원사업이다. 따라서 리 진료소와 리·동 병원 시설부터 복구하는 것이 기본이다. 더욱이, 심장혈관 질환을 치료하는 전문병원은 수술 또는 치료 후 집중관리를 위한 중증환자감시장치와 이를 관리하는 의료기술 및 전문간호의 제공이 요구된다. 제반 첨단 의과학 기술이 수반되어야 하고, 임상적으로 안전한 소모품의 지원과 서비스 질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요구되는 바, 전력난이 심각한 현재의 북측사회에서는 투자 대비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고 자칫 의료사고의 발생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 현재 심장전문병원은 민간단체에서 사업추진을 고려 중에 있는데, 북측은 심장전문병원을 건립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민간 차원이 아닌 당국차원에서 추

표 1. 보건의료분야 CRS 코드 분류체계에 따른 대북 지원사업 내용

DAC 구분	CRS 코드	내용	대북 지원사업 내용
일반 보건	12110	보건의료정책과 행정관리	-
	12181	3차진료분야 교육·훈련	일회성이지만 진료 및 수술 시범
	12182	의학 연구	-
	12191	의료서비스	적십자병원 등 전문병원 장비, 기자재, 치과진료
기초 보건	12220	기초보건의료	기초보건의료와 관련된 의약품과 백신 제공 등
	12230	기초보건 인프라	전문병원을 제외한 구역병원, 진료소 의료장비
	12040	기초영양	영양제 공급
	12250	감염성 질환 관리	결핵 및 기생충 질환의 관리
	12281	보건교육	-
	12282	보건인력 개발	-

2) UN Consolidated Interoagency Appeal, 2002, DPRK, 2002.

3) UNFPA · PPFK, 2007 세계인구현황, 2007.

4) WHO · UNICEF, IBRD, 2005 세계 임산부 사망보고서, 2007.

그림1. 북한의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도



자료: 3rd Annual UNICEF/AIHD Study Seminar, Thailand, 1993

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우선순위가 높지 않은 전문병원 등의 건립은 민간 차원에서 시행되도록 권장하고 당국은 인적 자원을 협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측에서 도급 종합병원은 3차 진료기관에 해당되며 앞서 파악한 바와 같이 현재 민간단체에서 대부분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다. 도 병원의 경우 각 의학대학이 연계되어 있어 의료인 기술교육과 병행하게 되면 사업효과가 제고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그동안 현대화시킨 의료장비 및 진단키트 등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남측이 의공학 및 진단·치료와 관련된 임상 기술교육을 병행하는 사업추진을 전제로 합의한다면 3차에 해당되는 기관이지만의 과학적 지식에 근거한 개발협력의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 다음으로는 제약공장의 현대화 문제이다. 제약공장에는 제약과정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과 원료의약품 지원이 병행되어야 비로소 의약품이 생산된다. 이미 남측 민간단체에서 평양에 2개소(정성종합의학센터·대동강제약공장 등)의 제약시설 및 설비를 지원하여 현대화 한 후, 항생제·수액제 등의 원료를 지원하여 현재 의약품의 현지 직접 생산체제로 전환되었다. 2007년부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원료지원사업(연간 10억원)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원료의약품의 부

족으로 가동률이 약 30%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제약공장 현대화 및 건설 사업은 시설 건립 후 원료의약품의 공급문제와 의약품 제조품질 관리(GMP)가 관건인 바, 이러한 실정을 감안할 때 새로운 공장 건립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전문가적 판단이 필요하다. 또한 북측 전역의 의약품 수급현황을 파악하여 필요의약품을 규명하고, 생산되고 있는 의약품의 분배 모니터링도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세번째, 전염병 통제와 관련된 남북간 사업 이행과정에서는 큰 장애가 없을 것이다. 북측 「보건성」이 2004-2008년 기간 중의 북측 보건문제로 결핵, 말라리아, HIV/AIDS 등의 전염성 질환 관리와 관련 임상검사기능 복구가 최우선 국가 보건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이들 질환 관리가 북측의 일차적인 보건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⁵⁾. 더욱이 「유엔아동기금(UNICEF)」의 대북 백신 지원이 2008년부터 중단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염성 질환은 남북 공동 대처가 매우 중요한 시점에 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전염성 질환의 확산 방지를 위한 당국간 상호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등의 공동 활동지역의 경우, 방역대책과 관련백신 지원사업은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 나아가 북측 주민의 건강보호 차원에서 북측의 중앙위생방역소 및 지방위생방역소의 기

능 복구를 위해 감염성 질환의 유입·전파·확산을 조기에 파악하는 감시체제 구축과 역학적 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술지원, 임상기구 및 시약, 그리고 백신 보급 등이 절실하다.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신종 전염성질환(SARS 등)에 대응한 기술 지원도 필요하다.

네번째, 한의학 발전과 관련하여서는 북측은 1993년 동(東)의학학을 ‘고려의학’으로 개칭하여 고려 의학을 주체적인 민족의학이라고 중요시하고 있으며 고려의학과 양의학의 결합을 통한 이른바 ‘주체의학’의 확립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의학대학과 약학대학에 ‘고려의학부’와 ‘고려약제약과’를 두어 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약초재배 사업과 야생약초 채취 및 보호증식 사업을 전 중증적으로 전개하여 고려약의 생산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보건성」에서는 과학적으로 검토하여 가치가 있고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된 9,000여 건의 민간요법을 책자로 출판하여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특히 침과 뜸은 현대의학과 접목하여 치료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2004년 북한 ‘고려 의학과학원’ ‘침구(鍼灸)연구소’는 고려전자의술체계를 개발하여 진단과 처방, 치료(약물 침구치료)와 치료효과 감시 등 모든 것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진단에서부터 치료까지 전 과정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체계에 의해 당뇨병, 만성 기관지전식, 고혈압, 간경화 등의 치료에서 효과를 내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상과 같이 고려의학의 발전 및 약초보호 재배증식에 대해서는 북한 당국이 강력한 자신감

과 함께 정책적 발전의지를 표명한 바, 북한이 자신감을 갖는 고려의학 분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의학을 발전시키고 생산 한약재를 남측에서 구매하도록 하여 북측에게 실익을 주는 계기를 마련하게 하는 것은 남북 공조 및 신뢰구축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4. 남북 보건의료 개발협력을 위한 향후 추진방향

1) 남북 당국간 추진방향

남북 개발협력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남북 당국간, 특히 남북 전문가간 상호 교류와 협력의 수준은 유동적이나 지금보다는 원활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북측 당국이 보건의료자원의 부족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시설 현대화와 함께 기술과학과의 접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건의료 원재료나 자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공급되기 위해서는 점증적으로 시장경제적 관점에서의 협력전략을 도입하여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측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남북경제 동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남측의 자본, 원료 및 기술과 북측의 노동력을 결합하여 북측의 보건산업 동력을 일으키고 점차 남측 기술을 이전하여 자생적인 생산조직을 발생하도록 하여 수익창출적인 구조와 판로를 마련(초기에는 남측에서 구매)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5) WHO, WHO Country Cooperation Strategy 2004-2008, 2003.

초기에는 의료기기 중에서도 북측에 긴급한 소모품이면서 기술이 될 필요한 주사기와 소독소프 공장 등을 건립하고, 치약, 칫솔, 목발 등 보건위생분야로 확대한 후 점차 정밀하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의료기기와 장비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자원확보 및 판로 등에 대한 개발협력 방안과 역할분담 등을 위해 남북 공동의 구체적인 장단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남북 원활한 기술 교류와 개발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보건 산업 측면의 경제협력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심장전문병원의 경우 남측이 북측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거나 민간차원에서라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게 되면 남북 보건의료 협력이 경색될 소지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남측은 첨단 의료서비스 질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요건을 도출하여, 북측과 협의하여 이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 전문가를 통한 의과학 관점에서 첨단 의료기술을 요하는 전문병원의 건립 요건을 확보한 후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현지 건립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유엔은 지원의 투명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원칙을 상정한 바 있으며 국제기구 및 NGO들은 공통적으로 인도주의 원칙(Humanitarian Principles)을 적용하여 '합동인도지원활동계획(Common Humanitarian Action Plan: CHAP)'을 작성하고 있다. 이 원칙에는 첫

번째로 사정에 의한 요구(assessed needs)를 통해 전반적인 상황이 파악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⁶⁾. 그만큼 북측의 현지 상황의 진단은 개발협력의 목적 달성과 지속성 유지를 위해 필요조건인 바, 상호 구축된 신뢰를 바탕으로 북측 당국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남북 총리회담에서 남과 북은 보건의료 및 환경보호분야의 협력을 위해 '남북경제협력 공동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남과 북은 상호 필요한 절차와 사업추진 단계 및 사업내용을 담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합의사항에 대한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이러한 내용을 담는 가칭 '남북보건의료 협정'이 필요하다.

2) 남측내 추진방향

남북 총리회담에서 북측은 남측이 제안한 의료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해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그간 인도적 지원사업의 연속선상에서 보다 큰규모의 물적 지원만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병원 현대화 사업에 남측이 남북 의료인력간의 교류를 전제로 할 경우,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상호 방문을 통한 의료인력의 기술 교류·협력이 어려울 경우, 정치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상호 접근이 용이한 개성공업지구에서 필요한 교

육·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개성공업지구의 남북협력병원과 연계한 가칭 「보건의료기술훈련센터」를 운영하여 의료기기·장비의 운용 및 유지·보수 관련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질병감시 예방·진단·치료 교육과 의과학 연구 및 학술 교류 등을 실시하는 것이다. 또한 정기적으로 말라리아, 홍역 등의 전염병 감시를 위한 상호 정보교환의 창구로도 활용하는 것이다. 임상기술을 요하는 경우 북한 의료인력을 인접국가인 중국 및 러시아, 몽골 등의 제 3국의 종합병원 및 의과대학과 연계하여 의료인력을 양성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병원과 제약공장 현대화 및 건설사업의 경우, 기존 시설의 활용여부와 필수약품 수급현황 및 제약관련 기술 이전을 위한 조건 등을 검토하여 기존 시설의 현대화와 신규 건립시의 비용 효과 측면을 고려하여 사업추진 방향을 수립하여야 한다.

북측 보건의료분야의 자생력을 떨어뜨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임상(진단·치료)기술 부족과 의약품 원료 등의 투입재료 등의 인프라 부족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전략들이 모색되어야 하는 바, 향후 남측 당국은 지속성 유지를 위한 방안까지 사전에 고려한 패키지 협상전략(package deal)의 마스터 플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남측의 장단

기 계획수립 아래, 치명적인 사망이나 이환을 줄일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지식과 기술을 동시에 전달 가능케 하는 전략, 그러면서도 북한 당국의 요구를 반영한 접근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간 대북 지원사업 및 투입자원을 표준화된 코드(예, OECD DAC의 CRS-Creditor Reporting System code)로 분류하여 분야별 지원 내역과 규모를 모니터링 하고, 이를 근거로 사업의 중복 방지와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획 및 평가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남북총리회담에서 합의된 병원 현대화 사업은 그간 민간단체의 병원 현대화 사업과 유사하다.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사업 현황을 이러한 관점에서 파악하여 대북 추진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 당국간 합의사업에 대해서는 합목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지난 10여 년간 민간주도의 대북 지원만으로는 북한이 처해 있는 복합적인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과 인프라 구축에 한계를 초래한 바, 당국간 개발협력사업이 민간부문을 선도하는 사업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국가 대북 정책기조 아래 남북총리회담에서 합의된 6개 분야의 분과위원회⁷⁾가 일관된 협상원칙에 의거하여 기획하고, 각 분야별 전문성을 반영하여 추진하며 추진상황에 대한 과정을 평가할 수 있도록 범 국가차원에서의 담당부서와 이를 공식화하여 책무를 부여하는 지원팀 구성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6) UN OCHA, Consolidated Inter-Agency Appeal for DPRK 2003, 2002.

7)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를 비롯한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남북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등임.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의 분과별 협력 위원회의 진행상황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정부 부처의 담당기구와 6개 분과 중 하나인 ‘남북 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를 지원하는 산·학·연으로 구성된 전문팀의 구성·운영이 필요하다.

정부부처 담당기구에서는 분과 전문팀의 전문가적 판단아래, 분야간 속도조절과 협업 또는 전문적 분업이 필요한 부문, 또는 사업지역이 개성공업지구, 평양 및 남포 등 동일지역인 경우 효과 및 효율성 측면에서 순차적·통합적 접근이나 공동 자원투입이 필요한 부분을 조정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대규모 재원이거나 다학제적 팀접근(multidisciplinary team approach)이 요구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문은 분과 전문팀의 기술지원아래 분야간 공동대처 또는 역할분담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기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제1차 남북총리회담에서의 합의

의 실행을 위해서는 자원 확보가 관건이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남측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중점사업(모성·어린이 건강 및 전염병 통제 등)과 북측 우선요청사업(병원 및 제약공장 생산시설 건립 등)을 상호 연계한 사업내용으로 구성하여 남북 당국간 개발협력의 동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분야별로 구체적인 개발지원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실행계획을 통해 단계적 지원협력 또는 상호 경제협력을 접목한 전략을 마련하여야 한다. 향후 북측의 핵문제가 완전 해결되고 북미관계가 개선되면 국제사회로부터의 자원조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남북 당사자 원칙에 기초한 국제기구와의 협력적 분업관계로 발전하여 보다 다양한 전문집단과의 연계 협력이나 참여를 통해 세계적 수준에 맞는 기술향상과 아울러 생산품의 판로를 확장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본지**